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청사 대작불사
 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북한산” 강행땀 불안사태 수준 저항 초래

정부는 공약이행 결단 내려라

조계종 ‘강경대응’ 방침

조계종이 북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관통을 백지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공문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범불교적 결단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조계종 대변인 현고 스님(기회실장)은 12월 18일 총무원 청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현고 스님은 “건설교통부

대통령의 SBS 대담내용 불교우롱 규정

환경단체들, “시민불복종운동·헌재 제소”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언론에서 불교계의 권위와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며 환경활동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는 등 부적절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규탄한다”며 “조계종은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2 · 5면

현고 스님은 또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과 ‘공문조사의 공정성 보장’ 및 ‘선거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약을 한 것’이라는 SBS 대담에서의 발언, 고건 총리의 ‘불교계의 반대로 5,40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발언에 대한 부적절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문조사를 거부한 것은 조계종이 아니라 정부이며, 불교계와의 약속을 어기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불교적 결단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치에 달려 있지만 매우 강력할 것이다. 불안 해피장 사태처럼 종단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은 17일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SBS 대담 발언은 대통령이 공약할 때 백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불교를 이란 식으로 우롱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가 아니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유지지는 시민의모임과 우이령보존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운운하나 정부의 계산법에는 북한산국립공원외 보전필요로 생성되는 연간 7,300억원이라는 가치는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다”며 “공사 강행 시 전국적인 국립공원 입장료 거부운동을 포함한 시민불복종운동과 함께 국민 환경권을 위한 헌법재판소 제소와 해당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명우 · 남동우 기자



◀조계종은 18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예수님 탄생 축하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경제는 어렵고, 대선자금 특권이니 하면서 연말 정국은 요동치고 있으니 세상살이가 편지 않다. 뉴스를 봐도 온통 풍채 아픈 얘기만 있으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나기도 한다.

이런 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불교계의 성탄절 축하하는 그레도 메미른 세상살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은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자는 내용의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축하

시했다. 서울 화계사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사찰 앞에 내걸었고, 대구영남불교대학은 18일 지역의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메시지’를 12월 17일 발표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총무원과 조계사가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의 성탄축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단순히 서로의 명절을 축하할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함께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낮은 곳에서 ‘너와 나’의 구분을 버릴 때 평화와 화해의 참뜻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종교인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 본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한 미군부대와 함께 교류하면서 법제도 보고 성탄축하 음악회도 열었다. 경북 구미불교사암연합회는 16일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성금을 기탁하고 성탄절의 뜻을 기렸다. 이밖에 지방의 여러 사찰들도 이번 화합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단순히 서로의 명절을 축하할 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함께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낮은 곳에서 ‘너와 나’의 구분을 버릴 때 평화와 화해의 참뜻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 종교인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희망을 가져 본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12월 13일 원적에 든 서용 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이 19일 봉행됐다. 서용 스님의 법구를 다비장으로 이운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용당 상순 대중사 원적

19일 백양사에서 조계종단장 봉행

불교계의 큰 별 하나가 또 갔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용당 상순 대중사가 12월 13일 밤 백양사 설선당에서 세수 92세, 법랍 7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서용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종단장으로 19일 백양사 대웅전 앞과 다비장에서 봉행됐다.

서용 스님은 원적에 들기 전 사자 호산 스님과 법담을 나누다 자세를 가다듬은 후 좌탈입랑(坐脫立亡)에 들어 평생 수행 정진한 수행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 번 백학이 날으니 천년동안 고요하고 술술 부는 술바람 붉은 노을을 보내네’라는 열반송을 남겼다.

21살 때인 1932년 만암 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한 서용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에 몰두해 왔

열반송

雲門日永無人至(운문일영무인지)
 猶有殘香半落花(유유잔향반낙화)
 一飛白鶴千年寂(일비백학천년적)
 細細松風送紫雲(세세송풍송자하)

운문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아직 남은 꽃은 반쯤 떨어졌네.
 한 번 백학이 날으니 천년동안 고요하고
 술술 부는 술바람 붉은 노을을 보내네.

며, 19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지내고 1996년 고불총림 방장에 오르면서 ‘무차선회’와 ‘참사람 결사’를 통해 선종진학과 인재양성에 매진해왔다.

장성=이준엽 기자

조계종 제26기 행자교육원

내년 2월 26일~3월 19일 개원

조계종 제26기 행자교육원이 내년 2월 26일~3월 19일 개원한다. 교육원은 12월 16일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를 열어 내년도 주요 교육 및 연구 일정을 확정했다.

31일까지 서류접수

11~14일(수석사), 직할·경기·강원권 2월 10~13일(용주사)로 일정을 잡았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문화재관람·공원입장료 20일부터 300원씩 인상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300원씩 인상하고 1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사찰 21곳 중 19개 사찰의 관람료는 기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로 인상됐다. 화엄사는 500원, 도갑사는 200원을 각각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에 한하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입장료는 기존요금 그대로 적용된다.

도립과 군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사찰의 경우는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호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원:(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경남 서부:(055)547-3469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에 관련한 불교계의 입장

우리 종단은 최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화답은 매우 치욕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최근 건설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교계를 모독하고 우리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의 정당한 환경활동과 선거공약 이행추구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계종은 불교계를 대표하여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불교계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계는 대선 당시도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2년 여 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구간 총 4.6km 8차선의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개설을 반대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이런 우리들의 반대노력을 평가하여 동감하고 민주당에서 불교계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채택했던 환경공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격상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백지화”로 전격 변경한 공약서를 만들어 2002년 12월 4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는 2003년 1월 9일 “신년하례식 법회”에서 1,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서 “반드시 쟁기겠다”는 말로 백지화 선거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백지화 공약”은 이행하지 않은 채 “제로베이스에서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지만 사실상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가운데 45일간의 활동은 시종했다. 활동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불공정하고 외국인의 속이였으며 대통령의 “제로베이스” 약속은 시작과 함께 실종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통산성이 4명이고 우회산성이 6명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공원의 생태는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뒤로하고라도 선거공약, 중진대택스님과 의 약속, 노선재검토위의 긍정적 결론 등은 통치자의 정책적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공약이행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건설교통부의 관통강행 움직임만이 감지되었다. 이에 우리 종단이 요청한 2003년 9월 22일 면담과정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공문조사” 수용을 제의했고 “공정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는 생소한 공문조사 방법과 사안에 대한 적용의 적절성,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저의를 의심하여 대부분 강력한 어조로 공문조사 반대와 불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종단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존중하고 공문조사 제의에 대한 진심을 받아들여 국민화합을 위한 결단으로 또 다시 공문조사 참여를 결정하고, 3단계 해법안을 10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3단계 해법 회신내용에는 “관통노선”에 대비할 수 있는 “비교노선(우회노선)” 탐색과 토목자료 마련을 위한 정부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방식은 공문조사 참여자의 명료한 판단을 위해 “비교노선”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정부는 소요시간과 경비를 부풀려 선전하고 “불교계의 사실상 공문조사 거부”로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였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정성 보장을 위한 매우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요구마저 거부한 자기모순을 은폐하고, 사실상 불교계의 공문조사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저의이며, 자신들의 정해진 관통관철의 속도를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또한, 고건 총리는 12월 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이 문제를 해를 넘길 수 없다”라고 결단의 시간이 촉박함을 시사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 불교계가 요구한 제도개혁을 마련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라는 등 서슴없이 백지화 약속 철회를 공식화 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알림마당”을 통해 불교계의 반대로 5,4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대로의 연발 결단의 배경은 그들이 주장해 온 “건전한 사회적 합의 절차의 사

례로서의 공문조사”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노선 재검토”가 아닌 사실상 건설업자가 추진 중인 일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실현의 편의제공과 일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

“5,400억 국민혈세 낭비” 운운 또한 공사가 완공되어 영업을 했더라면 그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이며, 실제 국고 손실된 것이 아닌데도 국민들로 하여금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를 국고나 탕진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일삼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오인시키고, 자신들의 결단을 정당화하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한다.

더욱 우리 2,000만 불자를 실망스럽게 한 것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선거공약 관련 발언이다. 상대당 후보에게 공약을 선점당한 상황에서 2,000만 불교계 표를 의식해서 선거공약을 강화시켜 제시한 것이 “백지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와중에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고 “그때 재론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발언인가? 불교계와의 약속은 일부로 해도 되고, 일부로 어겨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신념에서인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거들었으며 재검토다 공문조사다 하여 불교계를 혼란스럽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2,000만 불교도의 이름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대상과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백지화 공약은 일차적으로 조계종과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뒤로한 채 약속을 저버리고 상대를 경시한 중대한 발언을 광중사 대담에서 가법계 흘린 것에 대해 조계종과 불교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매우 당혹스럽다.

이에 우리 종단과 불교계는 향후 정부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후 종단적 그리고 범불교적 최후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

불기 2547(2003년) 12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현 고